

보도 일시	2022. 9. 13.(화) 11:00 (브리핑 시작시) 이후 사용 가능	배포 일시	2022. 9. 13.(화) 07:0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책임자	과장 박우성 (044-995-2020)
<총괄>	국책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백도준 (044-995-2021)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아래와 같이 총 2,267건(2,616억원)의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음.

- ① **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총 1,406건, 1,847억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
- ②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총 845건, 583억원**
 -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 등
- ③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 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음.

-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확인

-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
-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됨

■ 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

-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임

□ (점검 배경)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

** (재원)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 / (운용 : 산업부), (기금관리 : 한전)

□ (점검 내용)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계약·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은 기금관리 부분을,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지원사업 등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담합 부분을, 지자체는 대출과 실제사업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다.
 - 이번 점검은 전체 실태조사에 앞선 표본조사 성격을 띄고 있었다.
- (점검 결과)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① 위법·부적정 대출 : 총 1,406건 1,847억원

-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실시 중임('19.~'21., 3년간 총 6,509건, 1.1조원 지원)
 - 이번 점검은 지자체 표본조사를 통한 현장점검, 서류를 통한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점검결과 동 사업에 전반적인 부실대출* 사실을 적발하였음
- * 허위서류를 활용한 불법대출, 농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대출, 무등록업체와 계약 등

<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 표본조사 결과 >

①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하여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 **적발 사례** :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절하게 대출받았다.

-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되었다(대출금 34억원).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③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대출

- 정부는 또한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인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 *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하여야 함(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서류 전수조사 결과 >

④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 이번 조사는 최근 3년('19~'21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하여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하였다.
-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 **적발 사례** :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다)테크는 (라)발전사업자와 "(마)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부여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②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 총 845건, 583억원

-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

- 이번 점검을 통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되었다.

◆ 적발 사례

㉠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 B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를 203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 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의심

㉡ 결산서 조작 보조금 유용사례 : C시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사용(약 4억원)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 소득증대사업 부당사용후 집행완료 허위보고 사례 : D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용자사업*을 최근 7년('15~'21)간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은 용자사업 시행대상이 아님

** 사업비 잔액을 별도계좌('D군 농어업발전기금' 용자지원통장)로 이체하고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완료된 것으로 허위 결산

㉣ 미집행 지원금 잔액 233억원 미회수 방치 사례 : 4년('17~'20)간 407개 지원사업자에게 교부된 8,278억원 중 교부 후 2년 초과된 이월금(잔액) 233억원 미회수

② 융복합사업 경비 미정산 사례

- 융복합사업*('19.~'22, 약 1조 427억원, 379건) 점검결과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 낭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융복합사업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비 설치, 주거.공공.상업 혼재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산성 경비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

③ 기타 기금사업 중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 : 총 16건, 186억원

- 이번 점검에서는 △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① 장비구매 입찰과정 담합 사례

-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주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주)○○○ 등 2개 업체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 들러리 입찰시 ①제안서 미제출, ②예정가격보다 높게 입찰, ③자신의 가격보다 높게 입찰하게 함, 이후 해당 두 업체는 합병

②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사례

- 이번 점검 결과,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가정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절감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일종(총사업비 283억원, 기금 141억원, 민간부담 142억원)
- ** HE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360 백만원→ 최종 3,750 백만원 인정,
MDMS 소프트웨어 단가: 당초 400 백만 원→ 최종 4,750 백만 원 인정 등

③ 태양광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사례

- E군은 태양광을 조달 구매(약 5억원)하면서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당초 대용량 태양전지 모듈 4개 → 저용량 모듈 8개)이 들어왔는데도 적절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하였다.
- * E군은 물품구매시 1개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구매 신청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게 한 후, 실제 설치는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검수

[E군 태양광 조달구매 현황]

구분	시설1	시설2	시설3
당초 구매		계획없음	계획없음
납품 검사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확인하였다.

○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총 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되었다.

-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되었다.

○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금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사업과	책임자	과 장 박우성 (044-995-2020)
		담당자	사무관 백도준 (044-995-2021)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장 조택연 (044-203-5420)
		담당자	주무관 이고은 (044-203-5427)

□ 시행 체계

- 운용주체(산업부), 기금관리기관(한전 전력기금사업단), 전담기관(사업 기획, 관리, 평가 담당, 7개기관), 주관기관(사업 집행기관인 전력거래소, 안전공사, 발전사, 지자체 등)



- (7개 전담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기획·관리·평가 업무 담당

전담기관	주요 업무	'21년 예산 (백만원)
전력기금사업단 (산업부 직접수행 포함)	- 전력기금 관리업무 총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전기설비 안전점검 -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 - 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661,525
한국에너지공단	- 전력효율 향상 - 전기차충전서비산업육성사업 등	56,127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등	1,315,70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등	576,68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6,243
한국연구재단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64,4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	18,086

□ 최근 5년간 전담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전담기관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8,882	18,323	20,046	26,484	26,988	27,041
전력기금사업단 (산업부 직접수행* 포함)	27,309 (327)	4,717 (-)	4,805 (-)	4,998 (59)	6,616 (159)	6,173 (109)
한국에너지공단	6,227	575	811	3,541	486	81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55,727	7,973	9,181	11,931	13,231	13,4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5,973	4,516	4,711	5,308	5,767	5,67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16	69	67	51	63	66
한국연구재단	2,394	343	320	454	644	6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36	130	151	201	181	273

* 산업부는 7개 전담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에 기금 활용

□ 최근 5년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사업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4,671	1,530	2,336	4,390	4,261	2,154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융·복합지원)	11,643	1,217	1,366	2,366	3,213	3,48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9,558	2,128	1,831	1,917	1,843	1,839

* 금융지원 중 시설자금만 산정(운전 및 생산자금은 제외, 단 '22년은 8월말 기준)